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평화지역 발전」 정책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과 평화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개최한 정책토론회에 대한 결과보고 임.

□ 행사개요

- 일 시: 2020. 10. 6.(화) 13시 ~ 18시
- 장 소: 인제 스피디움 호텔 그랜드볼룸
- 주 최: 강원도, 도의회, 인제군, 백령행정학회, 프레시안
- 주요내용
 - 기초발제 : 한반도 평화와 평화지역 발전을 위한 우리의 자세
 - 제 1세션 :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평화지역 발전방안

□ 주요내용

【기조발제】

- 한반도 평화와 평화지역 발전을 위한 우리의 자세(상지대학교 정대화 총장)

-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화하면서 남북 간 교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안
- 한반도의 상황은 미국과 북한 모두 정책의 변화 여지가 크지 않은 바, 빠른 시일 내에 정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사례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자원 및 노동력과 만나면 2차.3차 산업에서 성공적인 협력모델을 창출 할 수 있음을 증명
- 평화는 곧 경제. 경제 발전과 평화를 분리하는 것은 20세기 냉전시대의 낡은 사고 방식
- 평화의 경제적 가치를 이해하고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창출해야 함.

【제1세션 : 발제】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기본구상과 추진방안(한국생활자치연구원 김주원 본부장)

- 통일 신뢰 프로세스를 위한 정부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
- 현 정부의 분권동향을 살펴보면, 지방분권, 지방 재정자립 실현,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등이 있음.
- 북미관계의 악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의 통일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노력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며 기초연설에서도 언급하였듯,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의 추진 등이 그 계기가 되어 통일 분위기가 지속 되기를 기대함.
- 강원도가 실질적으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특별자치도 법안에 대한 추진은 계속 진행하되, 접경지역 법안을 다시 특별법으로 제정 하면서 특구나 관련 사업의 모델들을 추가로 넣는 것을 제안드림.
- 현실적인 접근은 특별법안 보다는 (이번 정권 안에서는) 접경지역 법안 내 통일 사업의 모델을 추진하고 여기서 누락된 부분을 특별자치도 법안으로 추진하는 순서가 대안이 될 수 있음.
- 접경지역 특별 법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투입 등 개별 부분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며 행안부 지역개발과에서 총괄하는 바, 매년 예산이 줄어들고 있음. 이 법안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우선적으로 접경지역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접경지역 법안과 자치도 특별 법안을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그 실행력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임.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특별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정부직할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2. 남북강원도 평화통일축진을 위한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설정, 3. 평화특별자치도의 낙후된 정주여건 개선, 4.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경쟁력 강화·지역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이 있음.
- 특별자치도는 현 정부의 분권방향과도 연계하여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강원도의 입장에서 특별자치도의 추진 없이는 강원도 발전이 불가능 하다고 봄.

【제1세션 : 토론】

○ 신윤창 교수(강원대학교)

- 최문순 지사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되어왔던 바, 최근 흐름을 보면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등이 시도 행정통합에 착수하고 수도권인 인구 집중에 대한 해결책으로 초(超)광역 거점 구축 전략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임.
- 저출산 우려, 지역경쟁력 약화 등 강원도의 위기는 심화되는 가운데 대구·경북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인구의 확대 등 강원도의 존재가 더욱 축소되는 분위기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은 더욱 중요한 문제임.
- 따라서 강원도가 대구·경북, 광주·전남의 통합노력을 대응하려면 현재 추진 중인 자치도 설치 사업은 더욱 다방면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복수 교수(한림성심대학교)

- 김주원 박사님의 발제 자료는 매우 유용하며,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계·언론계·학계 등을 망라하는 방대한 사업을 추진해야하나, 여러 조건에서 열악한 조건을 갖춘 강원도의 현실이 매우 안타까움.
- 다만, 발제자료 중 3번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의 필요성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마지막인 한반도 평화정착 부분이 1번으로 즉, 그 필요성의 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 김기업 원주지사장(한국농어촌공사)

- 발제 자료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의 도출논리 부분에서 제주자치도와 현재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안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도입설계 및 목적 부분에 제주도와 차별되는 “통일”의 개념을 추가하는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 홍준현 교수(중앙대학교)

- 특별자치도 설치의 논리 중 하나로 제시하신 “지역 활성화” 차원의 경우, 물론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설치가 강원도의 지역 활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은 맞음. 다만, 그 설득 논리가 매우 좁게 느껴지는 바, 여기서 나아가 “평화·통일·관광” 3가지 모델의 개념으로 확대시킬 것을 제안함.
- 또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 계획의 세부 내용을 정비할 경우, 법·예산·인력의 투입 부분을 단순히 일괄로 나누지 말고 단기·중기·장기 사업으로 세분화하여 그 로드맵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아울러 현재 자치도 특별법률(안)을 재량조항과 강제조항 등으로 구별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연구로 법률(안)을 상황과 흐름·여건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제2세션 : 남북평화지역의 평화적 이용방안(인제군 주최)

- 좌 장 : 권인석 상지대학교 명예교수
- 발 제 : 정범진 한국DMZ 평화생명동산 부이사장
- 토 론 : 사득환 교수, 임완근 (사)남북교류진흥원 원장, 임길자 정토마을 대표, 최지은 강원연구원 강원도마을공동체센터 박사

○ 제3세션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도의회 주최)

- 좌 장 : 김병국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원장
- 발 제 : 박기관 상지대학교 교수
- 토 론 : 김규호 도의원, 허소영 도의원, 김상만 인제군의원, 김용자 인제군의원, 이해중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정책연구센터장

□ 향후계획

- 토론 주요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정책 구상에 반영
- 향후 토론회, 설명회 등의 공론화 진행 내실화 추진



토론회 행사장



토론회 행사장 입구



기조강연



제1세션



토론회 행사장 전경



토론회 행사장 전경

江原日報

2020년 10월 06일 (화)
종합 02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토론회

강원도는 6일 오후 1시 인제 스피디움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평화지역 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도와 강원도의회, 인제군, 백령행정학회 등과 함께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한반도 평화 전망과 평화지역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정대화 상지대 총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관계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 **최기영기자 answer07@**

연합뉴스

2020년 10월 05일 (월)
지역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평화지역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6일 개최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평화지역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6일 개최 (춘천=연합뉴스) 이재원 기자 = 강원도는 오는 6일 인제 스피디움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평화지역 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도와 강원도의회, 인제군, 백령행정학회 등과 함께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한반도 평화 전망과 평화지역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정대화 상지대 총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관계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 제1세션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평화지역 발전 방향", 제2세션은 "남북 평화지역의 평화적 이음 방안-인제서와지구 관련", 제3세션은 "지방자치 30년 지방의회 발전 그리고 내안"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평화지역 발전 전략도 구체화해 나갈다는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을 위해 참석 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jeon@yna.co.kr (홍)**

'20. 10. 6.(화) 강원일보

'20. 10. 5.(월) 연합뉴스

강원도민일보

2020년 10월 06일 (화)
종합 02면

오늘 인제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정책토론회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6일 인제군에서 열린다.

강원도는 이날 인제군 스피디움 호텔에서 김성호 행정부지사와 김규호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평화지역 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추진 전략 구상 등을 위해 마련됐다. '한반도 평화 전망과 평화지역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정대화 상지대 총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

으로 관계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다만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토론회 참석 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최소화해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토대로 평화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며 평화지역 발전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환**

'20. 10. 6.(화) 강원도민일보

2020년 10월 05일 (월)
종합

노컷뉴스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 반드시 실현"

6일 강원평화특별자치도=평화지역 발전 정책토론회

[강원CBS 박정민 기자]



강원도청 전경 (사진=강원도 제공)
최광수 강원도청장이 주례해 온 평화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여론 확산의 장이 열렸다.

강원도는 6일 오후 인제군 스피디움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김성호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평화지역 발전 정책토론회'를 강원도의회, 백령평정적회 등과 함께 연다.

토론회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추진 전략 마련 등을 위해 열리며 관계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이와 연계한 평화지역 발전 전략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구상은 유인 문 단 도인 강원도기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아 남북강원도 교류 확대와 협력사업 전개로 평화성적과 공동번영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자치권을 부여받아 특별회계와 남북협력기금 등 안정된 재원을 확보한 뒤 남북 고성군을 접계중심의 남북공동자치구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포함돼 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0인 미만으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진행된다.

jmpark@cbs.co.kr

'20. 10. 5.(월) 노컷뉴스